장휘국교육감, 송원고 자사고 지정 연장 조건부 승인

송원고·학부모들, 선발권 제한 반발

장교육감 "5가지 전제조건 미이행 땐 지정 곧바로 취소"

학교·교육단체 "인재 역외 유출…자사고 하지 말란 얘기"

광주 송원고등학교(교장 조명환)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재지정됐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신입생 선발시 성적제한 폐지' 등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연장을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3일 송원고의 자사고 지위를 5년간 연장하되, ▲재단 전입금을 대폭 확대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첨방식 학생 선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지표 추가 ▲국·영·수 위주가 아닌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5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의 실행여부를 점검해 2년 후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 권한을 가진 장 교육감은 이날 이같은 위원회의 결정을 가감없이 수용,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을 승인했다.

이는 일단 송원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해 준 뒤, 이후 5가지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학교측이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 전형의 경우 교육감 승인사항인 만큼 학교측이 교육청의 이행공문을 거부하고 기존 방식대로 모집요강을 제출하면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되면 송원고는 학생을 모집할 수 없고, 교육청 승인없이 모집을 강행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지정 취소'할 경우 학교 측의 반발과 교육계 분열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조건부 지정을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용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면 장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자사고 폐지' 효과는 톡톡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원고와 학부모, 교육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원학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고제철 이사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만나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했는데 그때 아무런 말이 없던 '성적제한 폐지'를 갑자기 전제조건으로 내 건 것은 학교 측을 기만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조명환 송원고 교장은 "송원고는 한해 100명씩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사고로서 변별력은 없고 등록금만 3배 비싸다면 누가 그런 학교에 오겠느냐"고 반발했다.

강효영 광주교총 회장은 "자의든 타의든 자사고를 맡았는데 정권과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그동안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정책을 뒤바꾸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이유없이 취소해서는 안되고, 특히 재학중인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교육청이 제시한 자사고 연장 전제조건 5가지

① 재단 전입금 대폭 확대
② '내신 상위 30%' 제한 폐지 및 추첨방식 학생 선발
③ 국·영·수 위주 아닌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④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지표 추가
⑤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자율형사립고로 재지정된 송원고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신입생 선발시 성적제한 폐지' 등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요구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평화맨션 조만간 정밀안전진단

비대위, 업체 선정작업 들어가

최근 건물 지하기둥에 균열이 발생한 광주 평화맨션이 조만간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입주민 20명으로 구성된 평화맨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회장·부회장을 선출한 뒤 해당 건물을 안전진단할 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바대위는 안전진단업체 5~6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뒤 비용 등을 감안해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향후 정밀안전진단 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및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이하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15층 이하 아파트는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가 소홀한데, 25년 이상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비용은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또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공업체가 보상토록 하고 하자보수기간도 2년~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립대 교수 금품수수 직무 무관 땐 해임 부당"

광주지법 판결

국립대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위촉, 도로 공사 설계 평가에 참여한 뒤 해당 공사업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무관하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국립대 교수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뒤 해당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로비 담당자로부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줘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해당 업체가 낙찰된 이후 2000만원을 받았다는 비위 행위로 지난해 전남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금품 수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수수와 국립대 교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남대 총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청렴의 의무) 혐의를 전제로 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 교수로 도로 공사 설계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의위원 업무 수행이 국립대 교수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대학교수 심의위원 후보군에 사립대 교수도 포함된 점, 설계평가 심의위원 업무는 대학에서의 연구, 강의, 학생 지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 교수 직무와는 성격·내용이 달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관련 형사 사건 재판(1심)에서도 국립대 교수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도 감안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환경단체 "호수로 변한 4대강, 보 수문부터 열어야"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각 수계별 대책위원회는 28일 "4대강 사업 후 3년간 본래 목표였던 '수질개선'과 '하천생태계 복원'은 찾아볼 수 없고 강이 호수로 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장 시행 가능한 보 수문부터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1일 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체된 수역에 서식하는 외래종 큰빗이끼벌레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하천의 흐름은 현저히 늦어졌다. 모래가 있어야 할 바닥에는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준설을 통한 유수단면적의 증가, 보 건설에 따른 수심의 증가는 결국 유속의 저하로 귀결됐다"며 "총 27개 지점에서 유속을 조사한 결과 15개 지점은 과거보다 10배 이상 유속이 늦어졌고, 측정불가 지역인 12개 지점은 40배 이상 유속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전남 6개교 추가 선정

장성남중·여수 율촌중
영광 법성중·고흥 금산중
완도 고금중·화순 능주중

연간 5억원씩 3년간 지원

장성남중·화순 능주중 등 전남지역 6개 중학교가로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농어촌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에 따라 장성남중 등 전남지역 6곳을 비롯해 전국 30개교를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지역 우수 중학교는 장성남중, 여수 율촌중, 영광 법성중, 고흥 금산중, 완도 고금중, 화순 능주중 등이다. 이들 학교에는 연간 5억원씩 3년간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담양 창평중, 나주 세지중, 무안 해제중 등 3개교가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정읍 동화중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1개 군에 최소 1개의 거점 중학교 육성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 거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 오케스트라, 외국어 집중교육, 국내외 진로체험 등 도시 못지 않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도시지역 학생이 쉽게 입학·전학 올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공모제(초빙형) 실시,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우수교원 우선 배치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전원학교 육성 사업와 고등학교 기숙형 공립고 지원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돌아오는 복지 농촌을 건설한다는 목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찰청장 뒤늦은 집안단속

"검찰과 공조 안하면 문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를 추적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공조는커녕 공적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는 모습에 대해 비난이 이어지자 경찰청장이 뒤늦게 '집안 단속'에 나섰다.

28일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성한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 수사 공조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차량 절도 불구속 조사받던 30대 전국 돌며 아파트 털이

쌍나팔

○…차량 절도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상습적으로 아파트 털이를 하다가 경찰서행.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6)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A아파트에 사는 김모(39)씨의 집에 침입한 뒤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수십 차례에 금품을 훔친 혐의.

○…박씨는 지난 3월 초 광주에서 차량 절도 혐의로 붙잡혔으나 CCTV에 찍힌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잠시 풀려났는데, 경찰은 아파트 등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 등을 통해 박씨를 검거.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5546	1	서구 유촌동 864 상무버들마을1주공아파트 104동 13층 1302호 84.98㎡	아파트	166,000,000 166,000,000	
2014타경 5966	1	서구 치평동 1168-9 중흥아파트 105동 6층 603호 160.06㎡	아파트	295,000,000 29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6235	1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339 460㎡	전	5,520,000 5,5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556	1	장성군 남면 월곡리 1188-3 3104.5㎡	답	114,866,500 114,866,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822	1	담양군 용면 용연리 16 1102㎡[현황잡종지]	답	247,020,000 247,020,000	일괄매각.목록1,2,4,6,7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5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입목및정원석,석축등토지에포함평가
		동소 18 795㎡[현황잡종지]	답		
		동소 18-3 165㎡	도로		
		동소 18-4 2296㎡[현황잡종지]	답		
		동소 18-5 475㎡	대		
		동소 19 519㎡[현황잡종지]	답		
		동소 21 621㎡[현황잡종지]	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4타경 6822	2	동소 22-1 1086㎡[현황잡종지]	답	54,300,000 54,3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담양군 용면 통천리 749 886㎡	전	11,518,000 11,51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7023	1	영광군 영광읍 양평리 244-7 2971㎡	답	29,710,000 29,71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13타경 21091	1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699 197㎡ 제시외 창고 등 175.5㎡	퇴비사	56,479,000 56,479,000	제시외건물포함
2014타경 5386	2	광산구 수완동 382-4 132㎡	도로	13,596,000 13,596,000	
2014타경 5706	1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78-5 4798㎡	공장용지	451,712,50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78-5 660㎡부속660㎡제시외방등88.5㎡	공장	451,712,500	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8. 13.[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8. 20.[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7. 2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